

일본의 재생에너지 규제완화 가속

-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,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에너지부족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에너지관련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
- 재생에너지 개발과 함께 전력시스템 개혁,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규제완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 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음

□ 에너지 관련 103개 항목의 규제완화

- 일본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보급·촉진을 위한 규제완화가 가속화될 전망. 태양광을 비롯하여 풍력, 소규모 수력발전분야의 복잡한 허가절차의 간소화, 기간 단축 등, 에너지 분야에 관한 103개 항목의 규제완화가 각의에서 결정
- 이번 규제 완화는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크다는 업계 및 지자체의 개혁 요망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임
- 당면한 전력부족 문제 대응책으로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촉진, 전원의 다양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
- 노다 총리가 의장인 행정쇄신회의에 설치된 규제·제도개혁분과위원회가 발표한 103개 항목의 내역을 보면, 재생가능에너지 39개

항목, 전력시스템 개혁 35개 항목, 에너지 절약 26개 항목 등임

- 일본정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은 실현 가능한 속도를 중시하여 거의 대부분은 정령 개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임

<재생에너지 규제·제도 개혁의 주요내용>

재생 에너지	태양광발전	-매매용 태양광발전시설을 공장입지법의 적용 예외로 함 -부지의 25%의 녹지의무화제도 폐지, 옥상발전이 용이
	풍력발전	-환경영향평가 항목수를 줄여 표준처리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 -풍차의 심사기준을 건축기준법에서 전기사업법으로 변경 -고층빌딩 수준의 구조심사가 불필요
	지열발전	-자연공원법 개정 -지열의 유망지역이 많은 국립공원에서 수직굴착이 가능
	소규모 수력발전	-하천법의 기준을 대규모 댐 발전과는 구별 -국토교통상의 인허가나 복잡한 서류제출 불필요
	바이오마스 발전	-나무부스러기 등의 가격이 수송비를 하회하는 경우도 폐기물로 취급치 않음. 폐기물처리법 의의 규제나 사업자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됨.
	보안림 활용	-보안림지정 해제 요건 중「그밖에 적지가 없는 경우」나 면적이 필요최소한이어야 한다는 등의 항목을 삭제
	재생에너지로 발생한 전력의 접속	-전력회사에, 보유한 송배전망의 접속가능지점 및 비용, 공기 등의 정보를 공시
	발전소 건설절차 간소화	-심사항목 중 중복부분 축소
전력 시스템	지역독점 개선	-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전력회사의 지역독점을 조사 °관할지역밖의 전력판매가 없는 현상 및 동경전력의 일방적인 전기요금인상 통고 등 우월적 지위 남용 및 경쟁저해 요인을 조사
	신전력 확대를 위한 지원	-지방자치체가 보유한 공영 수력발전의 전력 판매분야에서 일반경쟁입찰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시
에너지절약		-자동차 등 천연가스 이용확대를 위해 안전 규격을 개선, 2020년까지 모든 신축건축물·주택에 에너지절약기준에 적합토록 하는 것을 의무화

- 주요 항목은 결론날 경우, 즉시 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치하고, 빠르면 1~2개월 내에 실시하는 항목도 있을 것으로 보임

□ 태양광 발전

- 현재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공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임차료가 싼 토지가 아니면 채산을 맞추기 어렵게 되어 있음
- 이 때문에 일본의 최대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업체인 웨스트홀딩스나 미쯔비시 등 신규 진입사업자는 홋카이도나 동북, 큐슈지역에서 신설 후보지 확보를 서두르고 있음
-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면 공장 지붕의 임차 발전사업이 지가가 비싼 수도권이나 관서권의 공장지대까지도 후보지가 확대
- 보다 많은 태양광패널을 설치해두면 사업채산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고, 공장들도 지붕을 임대하여 이용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이점이 있음

□ 풍력

- 풍력분야에서는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환경정비 영향평가(assessment) 절차를 단축, 3년 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본풍력발전협회가 착공하기까지 기간이 너무 길다고 개선을 요구하여, 대기업들은 발전소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음
- 전원개발은 2020년경까지 일본의 풍력발전능력을 현재의 2배인 약 70kw로 끌어올릴 계획. 코스모석유회사의 에코파워도 2014년을

목표로 관동 등지에서 총 8만~9만kw정도의 풍력발전소 개발을 검토 중

- 일본 국토면적의 30%를 점하는 보안림을 전용하는 허가절차도 개선
 - 아키타시 북부에서 약 20km에 이르는 동해 연안에 대형풍차 50기를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절차간소화로 이 구상을 지원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임

□ 수력발전

- 소수력발전분야에서는 대규모 댐 수준의 번잡한 허가절차를 개선
 - 노무라홀딩스의 자회사 노무라·어그리플래닝&어드바이저리는 특구 제도를 이용 지방기업과 연대하여 농업용수의 흐름을 이용, 출력 10kw정도의 소규모 발전소를 100개 정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
 - 특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1~10kw의 소규모 발전소를 이용한 사업이 확대될 공산이 큼
- 전력시스템의 운용방식도 개혁대상임. 전력회사가 가진 송배전망을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접속 가능한 지점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촉진

□ 시사점

- 재생가능에너지란 문자 그대로 고갈될 우려가 없는 자연 에너지를 사용하여 재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함

- 일본의 경우 재생에너지 개발과 함께 전력시스템 개혁,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규제완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 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함
-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에서 새로운 수익 원천 창출을 위한 투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

<참고자료>

일본경제신문(2012.3.24)